

우리나라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연구

이 창근*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를 분석하는 것이다. 16개 시도별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자료를 토대로 지니계수분해방법을 적용하여 2008~2012년, 2013~2017년 두 기간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별 기초자료 분석결과, 지역별로는 영남권, 세대별로는 청년층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이 시급하였다. 지니계수분해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률의 지역격차는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타 연령층보다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수강권과 영남권 간의 지역 간 격차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 영남권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률의 경우 호남권과 영남권이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 간 불평등 뿐 아니라, 지역 내 격차의 지역별 기여도를 증가시키는 데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들 지역에서 고용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직업재교육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_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지니계수분해, 지역격차

*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연구원

Study for the Regional Disparities of Labor Force by Generation in Korea

Changkeu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gional disparities of labor force by generation in Korea. Based on data of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f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e decomposition of Gini coefficient was applied to compare regional disparities during the period from 2008 to 2012 and from 2013 to 2017. First of all, the study analyzed the regional basic data of labor force by generation and identified the region and the generation for whom labor policies should be urgently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the Yeongnam region and the youth. According to the decomposition of Gini coefficient, for the youth, the regional disparity of the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was expanded further and the inter-regional disparity was larger than other age groups. In the case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t is needed for the labor force to move to the Yeongnam region because the inter-regional disparity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 Kangwon region and the Yeongnam region significantly attributed to the overall inter-regional disparity. In terms of the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the labor force of each generation of Honam region and Yeongnam region caused widening of the inter-regional disparity and the intra-regional disparity. To sum up, more active labor measures should be come up with to create more jobs, provide retaining for employment, widen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job seekers and, in the end, improve the overall employment rate.

Key words _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orking Age Population, Decomposition of Gini coefficient, Regional Disparity

* Ph. D in Economics, Professor in Sungkyunkwan University, Researcher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진입에 이어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OECD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10%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본은 17년, 독일은 26년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근태·이지선, 2017).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대 기준으로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뿐 아니라, 특히 20~40대 연령층에서 더 큰 폭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젊은층 인력에 대한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OECD 선진국들의 경우 비록 20대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지만 30대와 40대 뿐 아니라 50대의 생산가능인구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40대의 생산가능인구는 향후 10년 간 약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들 계층이 청년층을 대체할 여지도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결국 생산, 소비,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내총생산 하락 등 저시경제의 악순환 구조 고착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서 지역 경제 균형 발전이 중요한 가운데 성장기여도 관점에서 생산요소로서 노동력의 지역 간 격차는 지역 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인 상황에서 취업률 및 고용률 또한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지역, 즉 공간 단위에서 구분하여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역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격차와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실업률의 차이, 임금 수준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혜원, 2007).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타연령 계층보다도 청년층에 대한 고용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고용성과 격차 및 청년층의 지역 간 인재유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문영만·홍장표,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2017년 기간 동안 지역별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를 지니계수분해방법을 이용하여 지역 간 및 지역 내 격차로 분해하여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어느 지역이 세대별로 노동력 격차 기여도가 가장 큰 지역인지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근태·이지선(2017)의 연구결과,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 계층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세대별 구분은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등 4개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는 임금피크제가 55세 이상부터 시행된 것을 고려하고 세대 구분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세대별 노동력을 지역 단위에서 접근하여 지역 간 노동력 격차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어느 지역이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 간, 지역 내 격차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는 데에 기존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

겠다.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역 단위에서의 노동정책, 인구가동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지역 노동 시장에서 격차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자료 분석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세대 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4장은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포함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이론적 배경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개념은 OECD 국가들로부터 중앙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탈 중앙화된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반정호, 2005). 지역 노동시장의 정의는 출퇴근 가능 지역을 의미하며, 행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역을 뜻한다. Casado-Diaz(2000) 또한 지역노동시장은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와 노동자를 구하려는 사용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지리적 범위로 정의함에 따라 취업자의 통근패턴을 기초로 지역노동시장을 정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어느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75%가 그 지역 내의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경우 이 지역을 하나의 지역 노동시장으로 판단하며 정책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정된 단위별로 집행되고 있다(정인수 외, 2003).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마이크로 데이터로 제공하고는 있으나 사업체 단위의 종사자 기준의 자료이며 연구자에 의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역내 통근율과 같은 지표를 별도로 산출하여 지역노동시장을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독립 지역노동시장의 존재와 인근 지역으로의 병합, 취업자수가 많은 지역의 통근비율 임의조정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박진희, 2005; 이 상호; 2008). 또한 노동력과 관련한 기본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수와는 상이한 개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노동력에 관한 지역단위의 자료는 시·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또는 생산가능인구이다. 특히 노동력과 관련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분석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반정호(2005)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에 의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노동력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혜원(2007)도 경제활동인구 조사가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력 조사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김복순

(2015)과 이근태·이지선(2017)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를 노동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 노동시장의 이론적 정의와 달리 행정구역 단위로 제공되는 자료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정호(2005)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보나 자료의 수준이 지역 단위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노동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구역별 지역 경계에 의한 분석이 지역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정호(2005)는 지역 간 고용성과와 성장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나 연구들이 행정구역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발표된 사실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규용 외(2015)의 연구에서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토대로 시·도 행정구역 단위로 역내 통근율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경우 86.1%, 비청년층의 경우 89.0%로 나타나 행정구역 경계에 의한 지역 단위의 지역 노동시장 분석이 타당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단위의 노동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 노동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하겠다.

2. 지역노동시장 격차 관련 선행연구

지역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격차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실업률 또는 임금수준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¹⁾ 예컨대 노동력의 지역 간 이주를 통해 지역 간 실업률 및 임금수준 차이가 해소되는지 여부, 지역 내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지역 간 실업률 및 임금수준 차이 해소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Blanchard and Katz, 1992; Decressin and Fatás, 1955; Choy et al., 2002; Mäki-Arvela, 2003; 김혜원, 2007). 김혜원(2007)은 노동자의 지역 간 이주를 통해 지역 간 실업률 및 임금 수준 차이가 해소되는 것을 미국식 조정메커니즘, 지역 간 이주는 매우 적은 비중만을 차지하고 지역 내 경제활동참가율의 조정에 의해 지역 간 실업률 및 임금 수준 차이가 해소되는 것을 유럽식 조정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89~2004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자료를 토대로 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역별 일자리창출의 차이가 지역별 고용성과의 차이를 설명할 뿐 아니라, 지역 내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역 고용량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식 조정메커니즘에 가깝다고 분석하였다(김혜원, 2007).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지역격차의 관점에서 볼 때 개별 지역을 단위로 상호 비교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지역 간 임금의 차이, 고용기회의 차이로 대변되는 고용성과의 지역격차를 규명하고, 이러한

1)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노동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격차와 관련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근로형태별, 성별, 직종별, 산업별 등의 임금격차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고용성과가 지역 간 노동이동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들도 있다(Blanchflower and Oswald, 1994; 신동균·전병유, 2002; 오민홍, 2007; 전병유, 2009; 이규용 외, 2015; 문영만·홍장표, 2017). 문영만·홍장표(2017)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역에 따른 임금격차를 추정해본 결과, 수도권에 취업하는 청년취업자가 6.5% 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하여 청년층의 고용성과의 지역격차를 규명하였다. Harris and Todaro(1970)는 일반적인 고용기회의 차이가 지역 간 노동이동을 촉진한다는 일반적 견해와 달리 도시 지역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노동이동이 발생하는 것은 도시 지역에서 얻게 될 미래 잠재적인 기대소득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반정호(2005)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노동시장을 산업, 고용, 임금, 생산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16개 시·도 및 권역별로 지역 간 격차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내총생산을 고려한 노동수요의 관점에서 서울, 경기, 경북이 노동수요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충남, 경북, 전남이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16개 시·도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지역격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혜원(2007) 또한 노동력의 대표 지표로서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을 시·도 단위에서 탐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역별 차이를 10년의 시차를 두고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1990년 초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는데 2000년 초반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참가율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고용률의 지역별 격차 또한 비교적 긴 기간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규용 외(2015)는 지역노동시장 격차와 관련하여 지역별 인적자본의 차이와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으로 인적자본의 집중이 이루어졌으며, 시군구간 인적자본 격차는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이 취약한지 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문영만·홍장표(2017)는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청년층 고용률의 경우 2016년 기준 수도권(44.7%)이 비수도권(39.5%)에 비해 5.2%p 정도 높았으며, 최근 수도권 규제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충청권과 제주를 제외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 고용률 격차는 7.3%p까지 확대된다고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지역 노동시장의 지역격차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실업률 또는 임금수준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나 총괄적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할 뿐, 지역격차의 관점에서 개별 지역을 단위로 구체적으로 상호 비교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III. 분석

1. 자료 분석

노동력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의 정의를 토대로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16개 시도별²⁾ 생산가능인구³⁾, 경제활동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최근 고용정책에서 고용률이 중요한 정책 지표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수 자료를 이용하여 시도별 고용률을 산출하여 포함하였다.⁴⁾ 분석 시기는 2008~2017년까지이며, 특히 2008~2012년, 2013~2017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두 기간 동안의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자 하였다.⁵⁾ 지역은 16개 시도를 수광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⁶⁾,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세대별 구분은 이근태·이지선(2017)의 연구 결과,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 계층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점과 임금피크제가 55세 이상부터 시행된 것을 고려하고 세대 구분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반영하고자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등 4개 계층으로 구분함으로써 세대별 지역별 노동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세종시의 자료는 2017년부터 제공됨에 따라 자료의 통일을 위해 세종시를 충청남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자료가 시도별로 제공됨에 따라 본 연구는 세대별 노동력의 시도별 격차 분석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3) 생산가능인구는 인구학적인 관점과 노동력의 관점에서 다르게 정의된다. 인구학적인 관점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말하며, 노동력의 관점에서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말한다. OECD에서는 인구학적인 관점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력 관점의 정의를 흔히 쓰고 있으나, 통계 목적에 따라서 혼용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는 노동력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4) 김혜원(2007)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로 인해 실업률이 고용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보다 고용률이 고용정책에서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이근태·이지선(2017)의 연구에서도 향후 경제성장률의 성장기여도 분석에서의 노동투입량을 예측함에 있어서 고용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고용정책의 최우선 목표도 고용률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5)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2010년 경제성장률을 6.5% 기록한 적도 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의 뒷받침 없이는 잠재성장률 3% 달성조차 어려운 장기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데에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이창근, 2017). 따라서 분석 시기를 금융위기 시점부터 최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2008~2012년, 2013~2017년으로 시기를 구분한 것은 2013년 이후 창조경제 정책과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고용률 증대를 위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급격한 고용정책이 시행된 것을 고려한 것이다.

6) 강원지역을 수도권 지역에 함께 포함한 것은 일일생활권 범위가 춘천, 원주로 확대된 점, KTX 개통에 따른 접근성 확대 등을 감안한 것이며 실제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에 있어서도 강원 지역을 수도권 지역에 포함하여 논의한 사례가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이동우 외, 2003; 김아영 외, 2008; Lee et al., 2008; 이창근 외 2009).

먼저 세대별 생산가능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을 살펴보면 전 연령층의 경우 수강권에 절반 이상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비록 소폭이지만 그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었다. 충청권 또한 전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 분포 비중이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영남권은 전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 분포 비중이 2008년 26.43%에서 2017년 25.5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호남권의 경우 同 기간 중 약 0.1%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영남권의 2008~2017년 기간 동안 전체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자연증가 또는 인위적인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타 권역보다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분포 비중이 증가추세를 나타낸 반면 수강권과 영남권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실제 수강권과 영남권의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2008년 대비 2017년 각각 약 6.51%, 10.01% 감소한 반면, 충청권은 약 2.73% 증가하였다. 30~5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을 살펴보면 영남권에서만 유일하게 2008~2017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였다. 실제 同 지역에서 이들 계층의 생산가능인구는 2008년 대비 2017년 기준으로 약 5.91% 감소하였다. 장년층에 해당하는 5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同 기간 동안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분포 비중이 감소한 반면, 수강권과 충청권은 증가하였다. 노년층의 고령인구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수강권에서만 유일하게 분포 비중이 2008년 43.39%에서 2017년 46.90%로 약 3.51% 증가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향후 현재의 고령화 사회, 나아가 고령 사회 진입에 있어 이들 계층에 대한 고용대책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수강권에서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그림 1>에서 보듯이 생산가능인구로 본 지역별 노동력에서 영남권은 모든 세대에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분포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청년층 및 30~54세 계층에서는 실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향후에 노동력 확보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상대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또한 수강권에서는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향후 노년층의 고용대책 또한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별로 세대별 노동력의 분포 비중 추이가 다를 뿐 아니라, 세대별 노동력의 절대값 또한 서로 다른 추이를 보임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노동정책 또한 상이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인구유입 및 이주정책도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표 1〉 생산가능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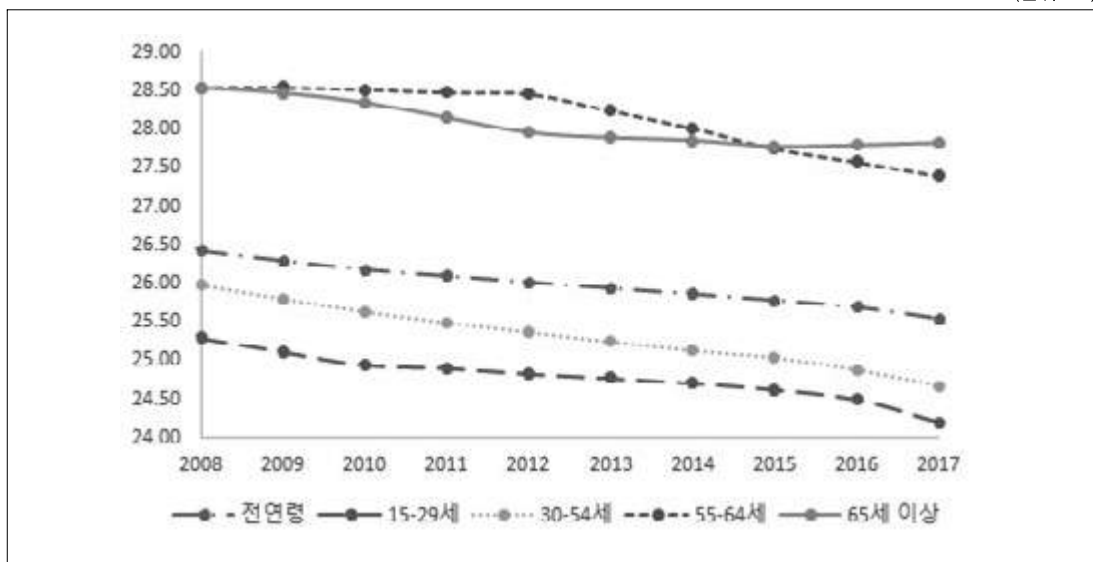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연령	수강권	52.15	52.27	52.36	52.39	52.43	52.46	52.48	52.48	52.47	52.57
	충청권	10.17	10.21	10.26	10.30	10.36	10.42	10.47	10.55	10.65	10.73
	호남권	11.25	11.21	11.19	11.20	11.19	11.18	11.19	11.19	11.18	11.15
	영남권	26.43	26.30	26.18	26.10	26.02	25.94	25.86	25.78	25.69	25.54
15 ~ 29세	수강권	54.03	54.07	54.06	53.84	53.75	53.66	53.58	53.51	53.46	53.70
	충청권	10.41	10.53	10.66	10.74	10.84	10.92	11.00	11.11	11.29	11.36
	호남권	10.26	10.28	10.33	10.50	10.59	10.65	10.71	10.76	10.75	10.73
	영남권	25.30	25.12	24.95	24.91	24.83	24.77	24.71	24.63	24.50	24.21
30 ~ 54세	수강권	54.07	54.23	54.37	54.42	54.43	54.44	54.42	54.38	54.42	54.53
	충청권	9.62	9.65	9.71	9.78	9.86	9.96	10.05	10.17	10.27	10.39
	호남권	10.33	10.31	10.29	10.30	10.34	10.35	10.39	10.41	10.42	10.41
	영남권	25.98	25.81	25.64	25.50	25.37	25.25	25.13	25.04	24.88	24.68
55 ~ 64세	수강권	49.04	49.31	49.55	49.79	50.06	50.36	50.68	50.95	51.09	51.26
	충청권	10.01	9.96	9.94	9.97	10.02	10.08	10.10	10.16	10.30	10.37
	호남권	12.40	12.18	11.99	11.75	11.46	11.31	11.19	11.14	11.02	10.98
	영남권	28.55	28.55	28.52	28.48	28.46	28.25	28.02	27.75	27.59	27.40
65세 이상	수강권	43.39	43.78	44.19	44.73	45.28	45.77	46.18	46.53	46.67	46.90
	충청권	12.14	12.06	11.96	11.83	11.70	11.54	11.41	11.34	11.29	11.26
	호남권	15.93	15.69	15.50	15.28	15.05	14.80	14.55	14.34	14.24	14.01
	영남권	28.55	28.48	28.35	28.16	27.96	27.90	27.86	27.79	27.80	27.83

* 자료출처: 통계청

〈그림 1〉 영남권의 세대별 생산가능인구의 분포 비중 추이

(단위 : %)



〈표 2〉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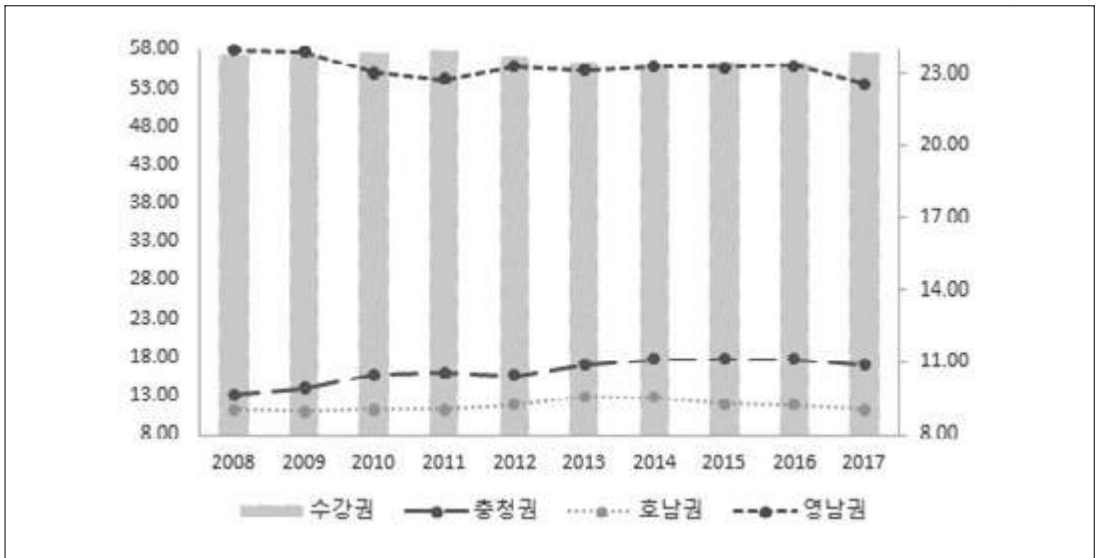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연령	수강권	52.56	52.52	52.88	52.98	52.93	52.81	53.01	52.94	52.91	53.22
	충청권	10.12	10.15	10.19	10.25	10.27	10.46	10.58	10.68	10.70	10.73
	호남권	11.32	11.35	11.16	11.15	11.11	11.18	11.10	11.14	11.20	11.10
	영남권	26.00	25.97	25.77	25.62	25.68	25.56	25.32	25.23	25.19	24.96
15 ~ 29세	수강권	57.31	57.19	57.46	57.63	57.06	56.36	56.04	56.34	56.33	57.44
	충청권	9.67	9.93	10.47	10.55	10.43	10.90	11.13	11.15	11.11	10.91
	호남권	9.06	8.99	9.04	9.06	9.23	9.60	9.55	9.26	9.22	9.07
	영남권	23.96	23.89	23.03	22.77	23.28	23.14	23.28	23.25	23.33	22.58
30 ~ 54세	수강권	53.95	53.90	54.13	54.31	54.35	54.36	54.47	54.31	54.44	54.55
	충청권	9.79	9.87	9.86	9.89	9.95	10.08	10.21	10.36	10.40	10.52
	호남권	10.56	10.58	10.39	10.44	10.42	10.45	10.43	10.55	10.59	10.52
	영남권	25.70	25.66	25.61	25.36	25.28	25.11	24.89	24.78	24.58	24.42
55 ~ 64세	수강권	47.00	47.85	48.92	48.87	49.16	49.40	50.09	50.37	50.51	51.08
	충청권	10.66	10.41	10.27	10.28	10.11	10.24	10.52	10.66	10.75	10.52
	호남권	13.40	13.17	12.94	12.57	12.20	12.05	11.70	11.57	11.56	11.42
	영남권	28.94	28.57	27.87	28.27	28.52	28.31	27.68	27.41	27.18	26.99
65세 이상	수강권	34.64	34.56	35.89	36.46	38.06	38.80	40.67	40.56	39.79	40.32
	충청권	13.80	13.18	12.51	12.96	13.16	13.15	12.64	12.34	12.00	12.35
	호남권	21.94	22.22	20.99	20.57	19.59	19.11	18.61	18.93	19.05	18.55
	영남권	29.62	30.04	30.61	30.01	29.19	28.95	28.08	28.17	29.16	28.78

* 자료출처: 통계청

〈그림 2〉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 추이

(단위 : %)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 추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전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 추이와 30~54세의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은 생산가능인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일부 세대별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 추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55~64세 계층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결과와 달리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이 충청권에서도 2008년 대비 2017년에 소폭이나마 감소하였다. 청년층의 경우 모든 권역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형태를 보였다. 특히 <그림 2>에서 보듯이 영남권의 경우 2008~2011년 기간 중에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3~2016년 기간 동안에는 증가 추이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실제 2008~2017년 기간 중 약 8.33% 감소하였다. 충청권에서는 2008~2015년 기간 동안 비교적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실제 경제활동인구 또한 2008~2017년 기간 중 약 9.75% 증가하였다. 궁극적으로 청년 세대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이 증감을 반복하거나 증가하는 등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청년 노동정책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표 3> 고용률의 권역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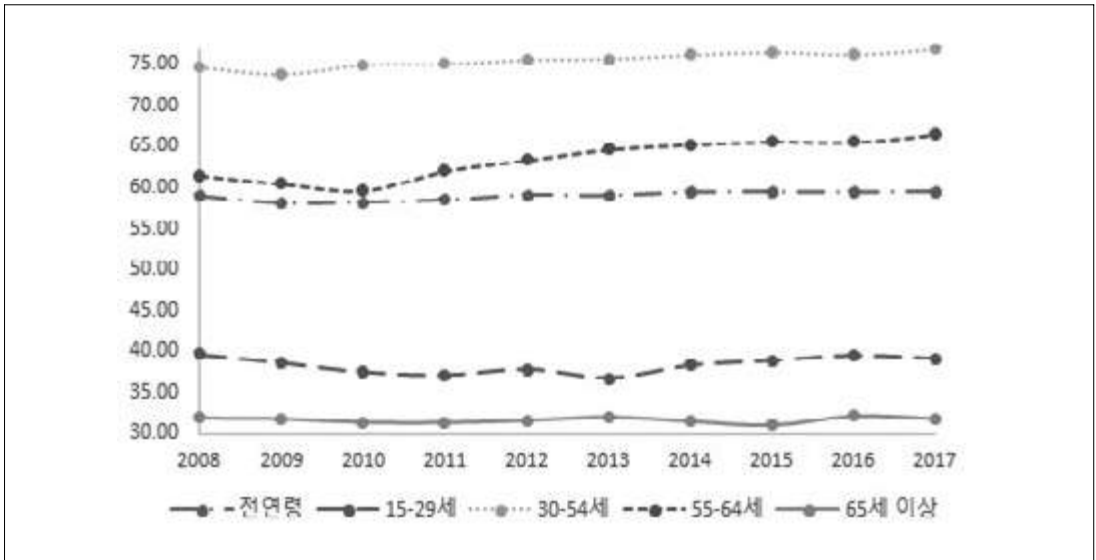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 연 령	수강권	60.05	58.82	59.08	59.58	59.87	60.00	60.87	60.77	60.84	61.31
	충청권	59.75	58.93	58.87	59.37	59.52	60.39	61.34	61.61	61.27	61.46
	호남권	60.59	60.43	59.49	59.64	59.89	60.33	60.59	61.13	61.33	61.14
	영남권	58.93	58.06	58.18	58.45	59.07	59.01	59.43	59.47	59.43	59.52
15 ~ 29 세	수강권	44.52	42.91	42.75	43.13	42.57	41.47	42.03	43.14	43.81	44.81
	충청권	39.05	38.45	39.98	39.98	39.01	39.48	41.20	41.75	41.91	41.14
	호남권	37.02	36.14	35.59	35.07	35.48	36.12	36.78	36.37	36.05	36.14
	영남권	39.61	38.56	37.38	37.02	37.77	36.68	38.29	38.87	39.54	39.12
30 ~ 54 세	수강권	75.03	73.67	74.17	74.83	75.23	75.75	76.72	76.78	77.12	77.44
	충청권	77.14	76.66	76.47	76.56	76.85	77.60	78.23	78.79	78.60	79.44
	호남권	77.29	77.12	76.42	76.80	76.80	77.16	77.42	78.87	79.19	78.77
	영남권	74.70	73.84	74.99	75.08	75.62	75.69	76.18	76.48	76.22	76.85
55 ~ 64 세	수강권	57.89	58.32	59.57	60.47	61.55	62.78	64.77	64.73	65.09	67.01
	충청권	64.62	63.77	63.60	64.79	64.30	65.88	68.46	70.07	69.63	68.71
	호남권	66.31	66.38	67.00	67.57	68.63	69.31	69.24	69.46	69.95	70.81
	영남권	61.48	60.46	59.65	62.03	63.38	64.69	65.26	65.62	65.56	66.50
65 세 이 상	수강권	24.23	23.52	23.22	23.29	24.92	25.94	27.25	26.27	25.80	26.09
	충청권	34.88	32.85	30.58	32.11	33.93	35.11	34.64	33.06	32.59	34.05
	호남권	42.32	42.86	39.59	39.64	39.63	39.96	40.20	40.45	41.39	40.97
	영남권	31.83	31.75	31.32	31.28	31.56	31.96	31.45	30.95	32.09	31.76

권역별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의 고용률은 모든 권역에서 2008년 대비 2017년 기준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영남권에서 생산가능인구 분포 비중이 감소 추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계층의 고용률이 2008년 39.61%에서 2017년 39.12%로 감소한 것은 청년층 취업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영남권의 청년층 취업자수는 2008년 989천명에서 2017년 879천명으로 약 11.1% 감소하였다. 호남권의 경우 청년층의 생산가능인구 분포 비중은 증가 추이를 보였지만, 청년층 취업자수 또한 감소함에 따라 고용률이 2008년 37.02%에서 2017년 36.14%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수강권과 충청권의 경우 청년층의 고용률이 201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0~54세 계층의 고용률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 이들 계층의 고용률 증가는 취업자수가 증가하였다기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의한 증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대책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의 30~54세 계층의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수는 2008년 대비 2017년 각각 약 5.91%, 3.21%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55~64세 계층의 경우 모든 권역에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폭보다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더 커 고용률이 양호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 분석에서 향후 수강권에서 노년층의 고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시점에서 호남권이 2008년 대비 2017년 기준 노년층의 고용률이 약 1.35% 하락하여 동지역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역 내 직업재교육, 맞춤형 채용 확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취업자수 증대에 따른 노년층 고용률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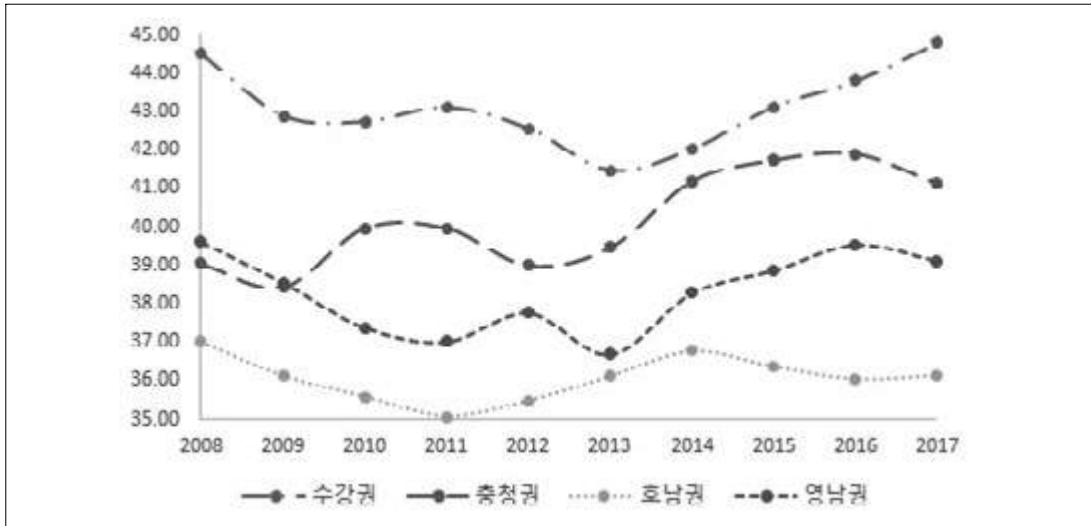
〈그림 3〉 영남권의 세대별 고용률의 추이

(단위 : %)



〈그림 4〉 청년층 고용률의 추이

(단위 : %)



궁극적으로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별 기초자료 분석결과, 지역별로는 영남권, 세대별로는 청년층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세대별 생산가능인구의 충청권으로의 분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집중이란 문제 이외에 충청권으로의 노동력 이동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강권의 경우 지방이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기존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향후 노년층의 고용대책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2. 지니계수분해

소득, 재정, 지역자원 또는 도시발전 등의 불균등한 정도를 분석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측정 방법으로 허쉬만-허핀달 지수, 브누이언 지수, 타일지수, 지니계수가 있다. 이 가운데 지니계수는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통계학적 지수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낼수록 평균적으로 불균형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그간 지니계수는 계층화가 가능한 자료를 집단 간 또는 집단 내의 기여도로 분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Dagum(1997)은 지니계수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소득 불평등 정도를 집단 간과 집단 내 격차의 비중을 통해 집단 간 지니계수와 집단 내 지니계수를 각각 분리, 도출하여 보다 세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⁷⁾ 지니계수의 분해과정은 다음과

7) 허쉬만-허핀달 지수, 브누이언 지수, 타일지수 등도 전체불균등도를 집단 간 및 집단 내로 분해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집단 간 평균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니계수분해방법의 경우 분해과정에서 집단 간 및 집단 내 각각의 평균에 영향을 받아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같다. 지니계수(G)를 소득 또는 측정하고자 하는 분석단위가 y_n 인 어떤 모집단 n 이 k 개의 지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면 식 (1)의 지니계수는 식 (2)의 지역 내 지니계수와 식 (3)의 지역 간 지니계수로 분해할 수 있다. 이 때 지역 내, 지역 간 지니계수는 결국 두 지역의 평균값(μ_j, μ_h)에 영향을 받게 된다. 식 (2)와 식 (3)을 토대로 j 의 하위 집단의 상대적 비중($p_j=n_j/n$)과 측정지표의 점유비중($s_j=n_j\mu_j/n\mu$)을 이용하여 식 (4)로 재구성할 수 있다. 결국 전체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는 지역 내 지니계수(G_w)와 지역 간 지니계수(G_b)의 합으로 최종 표현할 수 있다(이창근·강현철, 2017).

$$G = \frac{1}{2n^2\mu} \sum_{j=1}^k \sum_{h=1}^k \sum_{i=1}^{n_j} \sum_{r=1}^{n_h} |y_{ji} - y_{hr}| \tag{1}$$

$$G_{jj} = \frac{1}{2n_j^2\mu_j} \sum_{i=1}^{n_j} \sum_{r=1}^{n_j} |y_i - y_r| \tag{2}$$

$$G_{jh} = \frac{1}{n_j n_h (\mu_j + \mu_h)} \sum_{i=1}^{n_j} \sum_{r=1}^{n_h} |y_{ji} - y_{hr}| \tag{3}$$

$$G = \sum_{j=1}^k G_{jj} p_j s_j + \sum_{j=1}^k \sum_{h=1}^k G_{jh} (p_j s_h + p_h s_j) = G_w + G_b \tag{4}$$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실태 분석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을 분석단위로 활용하였다.⁸⁾ 세대별 노동력의 지니계수분해 분석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정리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2008~2012년 기간 대비 2013~2017년 기간의 지니계수가 완화되었다. 이는 이들 세대에서 지역별 노동력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세대에서 경제활동인구의 지역격차는 지역 내 요인보다는 지역 간 요인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는 고용률의 지역격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8) 앞서 세대별 노동력의 기초자료 분석결과,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 추이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생산가능인구는 고용률 산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표 4〉 경제활동인구의 지니계수분해

구분	2008~2012년			2013~2017년		
	전체	지역 간	지역 내	전체	지역 간	지역 내
전연령	0.431	0.363(84.04)	0.069(15.96)	0.431	0.361(83.76)	0.070(16.24)
15~29세	0.473	0.401(84.74)	0.072(15.26)	0.464	0.392(84.47)	0.072(15.52)
30~54세	0.442	0.373(84.40)	0.069(15.60)	0.443	0.372(84.02)	0.071(15.97)
55~64세	0.420	0.344(81.93)	0.076(18.07)	0.420	0.348(82.88)	0.072(17.12)
65세 이상	0.380	0.292(76.84)	0.088(23.16)	0.371	0.292(78.83)	0.079(21.17)

* 괄호 안은 %임

〈표 5〉 고용률의 지니계수분해

구분	2008~2012년			2013~2017년		
	전체	지역 간	지역 내	전체	지역 간	지역 내
전연령	0.027	0.020(76.39)	0.006(23.61)	0.024	0.019(76.79)	0.006(23.21)
15~29세	0.050	0.040(79.81)	0.010(20.19)	0.051	0.041(80.12)	0.010(19.88)
30~54세	0.018	0.014(78.63)	0.004(21.37)	0.017	0.014(78.19)	0.004(21.81)
55~64세	0.051	0.040(78.97)	0.011(21.03)	0.038	0.030(78.24)	0.008(21.76)
65세 이상	0.176	0.138(78.66)	0.037(21.35)	0.131	0.104(79.99)	0.026(20.01)

* 괄호 안은 %임

하지만, 고용률의 경우 청년층의 지니계수가 2008~2012년 기간 대비 2013~2017년 기간에 소폭이지만 악화되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률의 지역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청년취업의 지역별 격차가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나 고용률 모두 두 분석기간 동안 타 연령층보다 청년층의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청년층에 대한 노동정책이 지역별로 상이하다고 유추할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청년층에 대한 노동정책의 경우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제반 산업구조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지방정부의 고용정책 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간 고용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지역별 임금격차 완화 방안 및 일자리 정보 격차 해소 대책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실태와 관련하여 지역 간, 지역 내의 기여도를 지역별로 구분함으로써 어느 지역이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 불균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경제활동인구의 지니계수분해에서 지역 간, 지역 내 기여도 분석결과, 지역 간 기여도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수감권을 중심으로 수감권과 타 권역 간의 노동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2012년 기간 대비 2013~2017년 기간 중 불평도는 더 증가하였다. 특히 수감권과 영남권 간의 격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내 격차의 지역별 기여도에서는 수감

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남권이 분석되었다. 수강권의 지역 내 격차의 기여도 역시 두 기간 중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불평도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7에서〉 고용률의 지니계수분해에서 지역 간, 지역 내 기여도 분석결과, 지역 간 기여도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다르게 호남권과 영남권이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 간 불평도를 증가시키는데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분석기간 중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청년층 세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 계층에서 호남권과 영남권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의 경우 수강권과 호남권 간의 격차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호남권이 고용률 측면에서 청년층의 노동력 지역격차의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호남권과 타 권역 간 지역 간 기여도 비중 합은 2008~2012년 기간에는 55.94%였으나, 2013~2017년 기간의 경우 56.51%로 증가하였다.9) 지역 내 격차의 지역별 기여도에서도 청년 세대의 경우 호남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 계층의 경우 영남권이 가장 불평도가 높았다.

궁극적으로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는 지역 내 요인보다는 지역 간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률의 지역격차는 확대되었으며 지역 간 격차에서 청년층은 타 연령계층보다 더 크게 나타나 청년층에 대해 지역 간 노동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수강권을 중심으로 수강권과 타 권역 간의 노동력 격차가 큰 것은 무엇보다도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집중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서 기초자료 분석결과와 결부하여 볼 때, 영남권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위한 인구유입 및 이주정책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수강권 내 지역격차 기여도도 높아 수강권 내에서의 노동력 분산도 필요하다. 고용률의 경우 호남권과 영남권이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 간 불평도 뿐 아니라, 지역 내 격차의 지역별 기여도를 증가시키는 데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 적극적인 고용정보 제공,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직업재교육, 지역 산업구조 및 경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양성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들 지역에서의 노동력 유출 문제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6〉 경제활동인구의 지니계수분해: 지역 간, 지역 내 기여도 현황

구분	2008~2012년					2013~2017년				
	전체	지역 간		지역 내		전체	지역 간		지역 내	
전연령	0.431	0.363		0.069		0.431	0.361		0.070	
	기여도	수강-충청	20.856	수강권	69.995	기여도	수강-충청	20.925	수강권	71.240
		수강-호남	29.212	충청권	2.617		수강-호남	29.498	충청권	3.141
		수강-영남	32.644	호남권	7.763		수강-영남	32.934	호남권	7.008
		충청-호남	2.141	영남권	19.625		충청-호남	2.289	영남권	18.612
		충청-영남	5.816				충청-영남	5.349		
		호남-영남	9.331				호남-영남	9.004		
15~29세	0.473	0.401		0.072		0.464	0.392		0.072	
	기여도	수강-충청	21.363	수강권	74.706	기여도	수강-충청	21.233	수강권	75.777
		수강-호남	30.337	충청권	2.793		수강-호남	30.439	충청권	2.765
		수강-영남	33.832	호남권	5.437		수강-영남	34.065	호남권	4.708
		충청-호남	2.208	영남권	17.064		충청-호남	2.579	영남권	16.750
		충청-영남	4.204				충청-영남	3.803		
		호남-영남	8.057				호남-영남	7.882		
30~54세	0.442	0.373		0.069		0.443	0.372		0.071	
	기여도	수강-충청	21.185	수강권	73.697	기여도	수강-충청	21.297	수강권	74.459
		수강-호남	29.670	충청권	1.766		수강-호남	29.941	충청권	2.567
		수강-영남	32.891	호남권	6.011		수강-영남	33.361	호남권	5.381
		충청-호남	1.658	영남권	18.525		충청-호남	1.870	영남권	17.593
		충청-영남	5.504				충청-영남	4.948		
		호남-영남	9.092				호남-영남	8.583		
55~64세	0.420	0.344		0.076		0.420	0.348		0.072	
	기여도	수강-충청	19.529	수강권	59.609	기여도	수강-충청	20.052	수강권	63.618
		수강-호남	27.077	충청권	3.635		수강-호남	28.263	충청권	3.624
		수강-영남	31.048	호남권	11.093		수강-영남	31.191	호남권	9.179
		충청-호남	3.205	영남권	25.662		충청-호남	2.710	영남권	23.579
		충청-영남	7.844				충청-영남	6.950		
		호남-영남	11.297				호남-영남	10.834		
65세 이상	0.380	0.292		0.088		0.371	0.292		0.079	
	기여도	수강-충청	14.998	수강권	31.400	기여도	수강-충청	17.116	수강권	39.555
		수강-호남	20.798	충청권	8.436		수강-호남	23.494	충청권	7.600
		수강-영남	24.318	호남권	22.526		수강-영남	27.526	호남권	19.700
		충청-호남	9.209	영남권	37.639		충청-호남	7.190	영남권	33.146
		충청-영남	12.164				충청-영남	10.009		
		호남-영남	18.512				호남-영남	14.664		

* 기여도는 %임.

〈표 7〉 고용률의 지니계수분해: 지역 간, 지역 내 기여도 현황

구분	2008~2012년				2013~2017년					
	전체	지역 간		지역 내		전체	지역 간		지역 내	
전연령	0.027	0.020		0.006		0.024	0.019		0.006	
	기여도	수강-충청	7.056	수강권	13,127	기여도	수강-충청	8,118	수강권	15,966
		수강-호남	20.563	충청권	9,265		수강-호남	20.563	충청권	9,017
		수강-영남	15,989	호남권	38,336		수강-영남	15,816	호남권	41,165
		충청-호남	15.445	영남권	39,271		충청-호남	14,782	영남권	33,852
		충청-영남	12.586				충청-영남	13,017		
		호남-영남	28,360				호남-영남	27,703		
15~29세	0.050	0.040		0.010		0.051	0.041		0.010	
	기여도	수강-충청	12,626	수강권	26,668	기여도	수강-충청	10,082	수강권	31,257
		수강-호남	24,240	충청권	13,207		수강-호남	23,022	충청권	9,296
		수강-영남	21,703	호남권	37,234		수강-영남	22,482	호남권	34,143
		충청-호남	12,833	영남권	22,890		충청-호남	14,766	영남권	25,304
		충청-영남	9,726				충청-영남	10,923		
		호남-영남	18,871				호남-영남	18,725		
30~54세	0.018	0.014		0.004		0.017	0.014		0.004	
	기여도	수강-충청	10,274	수강권	9,922	기여도	수강-충청	9,009	수강권	11,335
		수강-호남	19,853	충청권	10,405		수강-호남	18,124	충청권	10,049
		수강-영남	14,645	호남권	36,870		수강-영남	15,190	호남권	38,467
		충청-호남	12,576	영남권	42,803		충청-호남	12,818	영남권	40,149
		충청-영남	14,886				충청-영남	16,070		
		호남-영남	27,765				호남-영남	28,789		
55~64세	0.051	0.040		0.011		0.038	0.030		0.008	
	기여도	수강-충청	9,062	수강권	10,981	기여도	수강-충청	9,845	수강권	12,879
		수강-호남	22,186	충청권	11,172		수강-호남	18,769	충청권	11,862
		수강-영남	14,359	호남권	35,796		수강-영남	16,112	호남권	30,393
		충청-호남	13,590	영남권	42,051		충청-호남	11,844	영남권	44,866
		충청-영남	13,327				충청-영남	16,052		
		호남-영남	27,475				호남-영남	27,377		
65세 이상	0.176	0.138		0.037		0.131	0.104		0.026	
	기여도	수강-충청	9,224	수강권	11,086	기여도	수강-충청	9,294	수강권	13,365
		수강-호남	21,683	충청권	13,030		수강-호남	23,233	충청권	13,561
		수강-영남	16,296	호남권	30,583		수강-영남	14,043	호남권	30,940
		충청-호남	13,998	영남권	45,300		충청-호남	14,234	영남권	42,134
		충청-영남	13,892				충청-영남	12,851		
		호남-영남	24,906				호남-영남	26,345		

* 기여도는 %임.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2008~2017년 기간 동안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별 기초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영남권, 세대별로는 청년층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 청년층 및 30~54세 계층에서는 실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향후에 노동력 확보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상대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영남권은 취업자수도 감소하여 청년층 및 30~54세 계층의 고용대책도 시급하였다. 또한 세대별 생산가능인구의 충청권으로의 분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집중이란 문제 이외에 충청권으로의 노동력 이동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강권의 경우에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방이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기존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향후 노년층의 고용대책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세대별 노동력의 지니계수분해 결과, 지역격차는 지역 내 요인보다는 지역 간 요인에 기인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의 지역격차는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타 연령층보다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수강권을 중심으로 수강권과 타 권역 간의 노동력 격차가 큰 것은 무엇보다도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집중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수강권과 영남권 간의 지역 간 격차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고용률의 경우 호남권과 영남권이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 간 불평등뿐 아니라, 지역 내 격차의 지역별 기여도를 증가시키는 데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지역적으로는 영남권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위한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영남권은 노동인구의 유입을 위한 기업유치 전략, 지역 내 창업정책,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우수 인재 및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대별로는 청년층에 대해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제반 산업구조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적극적인 고용정보 제공,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정책 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간 노동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지역별 임금격차 완화 방안 및 일자리 정보 격차 해소 대책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년층의 고용대책과 관련해서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한정된 일자리를 감안할 때 민간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청년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창업정책이 보다 활발히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과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지역 내 산업연관 관계에서 산업파급효과를 통한 선순환 성장을 유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 노동시장의 자료 제공이 행정구역 단위로 제공됨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분석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기존의 견해와는 다른 영남권의 노동력 부족 문제, 충청권으로의 노동력 이동, 수강권의 노년층에 대한 고용대책의 시급성, 호남권·영남권의 세대별 지역별 고용격차 주도 등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이렇게 도출된 이들 지역의 문제점 또는 특정 현상을 중심으로 일반연산균형분석방법을 이용한 지역경제모형을 구축하여 지역 내 지역 간 경제파급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가와 노동은 생산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소비, 투자, 정부재정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호남권·영남권이 세대별 지역별 고용격차를 주도하는 현상이 일시적인지 과거부터 내재되어온 구조적 문제인지 시계열분석을 통해 분석할 필요도 있다. 이외에도 지역 단위의 세대별 노동력 격차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산업별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부분에서 산업별 노동력 파악 외에도 실질적인 고용대책 마련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를 초래하는 원인과 관련하여 국지적 또는 일반적 요인분석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김이영·윤성도·김의준(2008). “광역경제권 설정 대안에 따른 제조업 생산성 비교분석: 비용함수 누적공간효과모형의 적용”, 『국토연구』, 59: 173-188.
- 김복순(2015). “청년층 노동력과 일자리 변화”, 『노동리뷰』, 2015.10: 69-85.
- 김혜원(2007). “한국의 지역노동시장 조정의 동학”, 『노동정책연구』, 7(3): 1-33.
- 문영만·홍장표(2017).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지역인재 유출요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5(2): 165-187.
- 반정호(2005).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지역별 격차”, 『노동리뷰』, 2005.08: 34-49.
- 박진희(2005). “지역노동시장은 존재하는가”, 『노동리뷰』, 2005.10: 60-70.
- 신동균·전병유(2002).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변화패턴과 임금곡선”, 『노동경제논집』, 25(2): 1~32.
- 오민홍(2007). 『니트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이규용·고영우·김우영·오민홍·이상호·홍성효(2015). 『지역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근태·이지선(2017).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LG경제연구원.

- 이동우·김광익·박은관·문정호(2003).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 국토연구원.
- 이상호(2008). “지역노동시장권(LLMAs)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8(4): 147-182.
- 이창근(2017). “산업별 창업 결정요인의 세 가지 가설 검증, 2008-2014년”, 『지역연구』, 33(1): 17-27.
- 이창근·강현철(2017). “경기도의 생활 인프라 격차 분석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14(1): 173-187.
- 이창근·최명섭·김의준(2009). “우리나라 지역의 총요소생산성과 결정요인 분석: DEA와 2SLS를 이용하여”, 『지역연구』, 25(3): 25-43.
- 전병유(2009). “지역 간 고용 성과격차에 한 연구”, 『경제연구』, 27(4): 121-148.
- 정인수·전병유·임상훈(2003). 『지역 노동시장 연구: 실증분석과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Blanchard, O. J. and Katz, L. F.(1992). “Regional Evoluti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992.
- Blanchflower, D. G. and Oswald, A. J.(1994). *The Wage Curve*, MIT Press: MA.
- Casado-Díaz, J.(2000). “Local Labour Market Areas in Spain: a Case Study”, *Regional Studies*, 34(9): 843-855.
- Lee, C. K., Choi, M. S., and Kim, E. J.(2008). “Assessing Development of Region-States in Korea: in terms of agglomeration economies in Korea”,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ty Planning 2008*.
- Choy, W. K., Maré, D. C., and Mawson, P.(2002). “Modelling Regional Labour Market Adjustment in New Zealand”, *Working Paper*, 02/01, NEW ZEALAND TREASURY.
- Dagum, C.(1997). “A new approach to the decomposition of the Gini income inequality ratio”, *Empirical Economics*, 22(4), 515-531.
- Decressin, J. and Fatás, A.(1995). “Regional Labor Market Dynamics in Europe”, *European Economic Review*, 39(9): 1627-1655.
- Harris, J. R. and Todaro, M. P.(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0(1): 126-142.
- Mäki-Arvela, P.(2003). “Regional Evolutions in Finland: Panel Data Results of a VAR Approach to Labor Market Dynamics”, *Regional Studies*, 37(5): 423-443.

원 고 접 수 일 | 2019년 1월 7일

심 사 완 료 일 | 2019년 2월 1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9년 2월 7일

이창근 bigtwo7@snu.ac.kr

2012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연구부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로 근무 중이다. 최근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저성장 지역의 불균형 성장원인과 지역 경제정책, 인적자본, 창조경제 및 창업 등이다. 논문으로는 “산업별 창업 결정요인의 세 가지 가설 검증, 2008~2014년”(2017), “The creative economy leads the economic growth and creates jobs during the recessions in Korea”(2018) 등을 다수 발표하였다.